

##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 농업협력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 비핵화·평화 대화 진전과 대북 교류협력의 재개 전망

2018년 4차례에 걸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양측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했으며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미 3자는 ‘4.27 남북합의’, ‘6.12 북미합의’, ‘9.19 남북합의’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필요할 실무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전명한 바 있다. 비록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의 커다란 진전은 유보되었으나, 비핵화·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와 남북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향후 평화 이행시대의 전개에 관해 긍정적 전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으로 남·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및 농업교류협력도 재개될 수 있다. 이들 교류협력은 북한의 호응과 변화에 더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단계적 접근과 차별적 준비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북 경제협력 단계를 구분하는 각각의 기점은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시작, 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착수, 북한의 체제전환 완료 등이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은 단계별 환경에 따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로 바람직한 준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 진전과 제재 해소 국면에 수행할 농업교류협력의 준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과 농업교류협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재가 완화된다고 해서 북한의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제, 경제 및 농업 운영주체의 능력, 현재의 농업상황이 단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단계 북한의 대외 농업협력 환경은 현 수준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여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범영농단지 개발협력사업과 상업적 차원의 교역을 통해 지속성 있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인적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착수 단계를 위한 농업교류협력 준비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북한의 시장경제 운영 역량이 높아지면, 이를 배경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농업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 추진하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이 주도할 시장지향형 농업·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로서 EU가 추진했던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 관련 산업의 대북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경제체제 전환 이후의 농업교류협력 추진이다. 이 시기가 되면 일반적인 경제교류 협력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남북 간 시장경제 공동체에 조응하는 농업정책을 미리 준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주체별 역할 분담과 제도적 환경의 조성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접근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규모가 큰 농업개발 협력사업을, 민간지원단체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사업, 기업은 상업적 교역과 투자 협력사업을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효율화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협의, 필요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구축과 시행, 국제기구와의 협조, 국내 민간 협력체계 구축, 대북 교역과 경험 축진 대책의 수립 등을 들 수 있다.